

장마철 수질오염행위 특별단속

환경부는 장마철에 대비, 지난 6월 16일부터 8월 2일까지 환경오염 우려가 있는 폐수·폐기물 배출시설을 특별 단속하기로 했다.

이번 단속은 16개 시·도와 8개 지방환경청 주관으로 실시되며 시·군·구, 검찰과의 합동단속도 병행된다. 중점 단속대상은 환경오염 우려가 있는 폐수·폐기물 배출시설, 운영관리가 부실한 하수·폐수 처리장 등이다.

대기오염물질 배출기준 강화

앞으로 서울시내 자동차정비업소 등지에서 배출하는 휘발성유기화합물(VOC) 허용 기준이 강화되고 방지시설 설치도 의무화된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의 '서울시 대기오염물질 배출 허용기준 등에 관한 조례' 개정조례를 지난 6월 16일 신설, 공포했다.

휘발성유기화합물은 휘발성이 높아 쉽게 증발하는 탄화수소화합물로 지구온난화와 오존층 파괴의 원인이 되며, 악성빈혈, 피부염, 말초신경장애, 호흡기질환 등을 일으킨다.

서울 시내에서 발생하는 휘발성유기화합물은 자동차정비업소의 도장시설에서 95%, 가구나 기계부품 등 기타 도장시설에서 5% 가량 각각 배출되고 있다.

개정조례에 따르면 휘발성유기화합물을 쏟아내는 도장시설의 탄화수소(THC) 오염물질 배출 허용기준을 시간당 배출가스량 1만m³이상 시설은

50ppm이하, 1만m³미만 시설은 100ppm 이하로 각각 제한한다.

또 규모 5m³ 이상이거나 3마력 이상의 도장시설을 갖춘 자동차정비업소는 시간당 배출가스량 1만m³이상 시설의 경우 70%이상, 1만m³ 미만은 85% 이상 배출가스를 제거할 수 있는 방지시설을 각각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시는 이 같은 기준을 기존 시설의 경우 내년 4월부터 적용하되 신규 시설은 공포이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

환경부는 장마철에 대비, 지난 6월 16일부터 8월 2일까지 환경오염 우려가 있는 폐수·폐기물 배출시설을 특별단속하기로 했다.

”

환경기술상 후보 공모

- 6개 부문에 1억3천만원을 부상으로 지급

환경부와 한국환경기술진흥원은 국내 환경기술 발전에 기여한 우수 기술인을 발굴 포상하는 제6회 환경기술상 수상후보자를 공모한다.

“95년부터 격년제로 시행하고 있는 환경기술상은 2001년 제5회까지 사전 오염예방 대기·수질·폐기물 환경기

반기술부문 등 5개 부문에 걸쳐 총 33건의 우수 기술을 발굴하여 대상(대통령상), 우수상(국무총리상), 장려상(환경부장관상)을 각각 시상해오고 있다.

금년에 시행되는 제6회 시상부터는 환경기술 분야의 왕성한 연구개발 활동을 촉진하고 우수 기술인의 사기를 진작하기 위해 여성환경기술인 부문을 신설하여 총 6개 부문에 걸쳐 시상되며, 수상자에 대한 포상금도 대폭 인상하여 대통령상인 대상의 경우 기존의 2배인 3천만원이 수여된다.

추천 대상은 환경기술 산업 분야에서 우수한 연구개발 성과로 국내 환경기술 발전에 공헌한 업적이 뚜렷한 자 또는 연구개발팀으로서 국내 거주자를 대상으로 하며, 후보자에 대한 추천 접수는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한국환경기술진흥원에서 받는다.

7월부터 1회용품 사용규제 확대 시행

부산시는 개정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시행규칙'이 시행되는 7월 1일부터 백화점 등 대규모 점포와 약국, 서점등에서도 1회용 합성수지 용기사용과 비닐봉투 무상제공이 금지되는 등 1회용품 사용규제가 확대된다고 최근 밝혔다.

우선 백화점이나 대형할인점 등 대규모 점포내 업소들이 제공해 온 떡이나 만두, 순대, 반찬류 등을 담은 1회용 합성수지 용기사용이 금지된다.

또 식품접객업소와 집단급식소에서는 1회용 비닐 식탁보 사용금지와 함

계 외부로 반출되는 1회용 합성수지 도시락 사용도 규제된다.

■ 화학물질 배출량 공장별로 공개

그동안 지역·업종별로 통계 처리되던 화학물질 배출량이 앞으로는 공장별로 공개된다.

또 화학물질을 사용하는 공장은 제조·사용 등에 관한 서류와 기록을 5년 동안 보존해야 한다.

환경부는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유해화학물질관리법 개정안을 마련, 입법예고했다고 지난 6월 11일 밝혔다.

이에 따라 화학제품 제조, 석유정제, 금속 가공 등 1천여개 화학물질 배출량 조사 대상 업체들은 자발적으로 배출량을 줄이려는 노력을 강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 내년부터 기업체 은행대출 때 환경성 고려

내년부터는 기업체의 은행대출 때 재무구조뿐만 아니라 환경성이 중요한 평가요소로 작용할 전망이다.

환경부는 전국은행연합회, 신용보증기금과 함께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환경친화적 금융 가이드라인'을 연말까지 마련, 내년부터 시범사업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최근 밝혔다.

미국의 경우 기업가치 평가 때 환경성을 중요한 평가요소로 삼고 있다.

환경성 평가기준으로는 환경경영, 환경보고서 발행 여부, 환경법규 위반 횟수, 친환경적 조달체계 구축 여부, 폐기

물 처리 방법 등 환경분야와 관련한 전반적인 기업활동이 폭넓게 포함된다.

■ 폐수종말처리시설 방류수수질기준 단계적 강화

환경부는 산업단지 및 농공단지에 설치 운영하고 있는 폐수종말처리시설의 방류수수질기준을 2단계로 강화하고, 관리대상 골프장 확대 등을 주요 골자로 하는 수질환경보전법시행규칙중



환경부는 산업단지 및 농공단지에 설치 운영하고 있는 폐수종말처리시설의 방류수수질기준을 2단계로 강화하고, 관리대상 골프장 확대 등을 주요 골자로 하는 수질환경보전법시행규칙중개정령을 지난 6월 17일 확정 공포했다.



개정령을 지난 6월 17일 확정 공포했다.

이번에 확정 공포된 수질환경보전법시행규칙중개정령의 주요내용으로는 사업자의 편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배출시설 변경신고 사항중 배출시설 방지시설의 임대 및 폐수처리업자의 변경은 사전신고에서 사후신고로 전환하고, 폐수를 전량 위탁처리하는 사전처리시설 및 X-Ray시설은 현 폐수배출시설에서 기타수질오염원으로 분류

했다.

공공수역의 부영양화 예방 등 4대강 수질개선을 위하여 폐수종말처리시설의 방류수수질기준(BOD, SS, T-N, T-P)을 하수종말처리시설의 방류수수질기준과 동일하게 강화하고 2008년부터는 대장균 항목을 새로이 추가하되, 이해 당사자의 사전준비 등을 고려하여 2단계(2008년, 2013년 기준)로 나누어 적용하도록 했다

또한, 골프장에서의 맹독성 고독성 농약사용으로 인한 수질오염을 예방하기 위하여 관리대상 규모를 현 골프장 면적 30만㎡ 상에서 3만㎡상 또는 3홀상의 골프장으로 확대하는 한편, 군부대 골프장 등 비영리시설도 관리대상에 포함했다.

■ 수도권 476개 사업장 오염을 배출규제

오는 2007년부터 수도권에 있는 삼성·LG 등 대기업과 중소기업 등 476개 사업장이 오염물질을 일정 수준이상으로 배출할 수 없게 된다.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의 구체적인 내용을 확정했다.

환경부의 한 관계자는 "환경부는 수도권에 있는 대규모 공장 등을 포함한 476개 사업장에 대해서 오염물질을 제한하는 방침을 추진할 것"이라며 "여기에는 LG·삼성·현대 등 대기업과 규모가 큰 중소기업이 모두 포함된다"고 말했다.

그는 "오염물질 배출기준으로 1중에

서부터 3종 업체까지를 규제 대상 사업장으로 포함시킬 계획"이라며 "산자부와 건교부 등과 구체적인 협의를 거쳐서 대상 사업장 규모와 지역 등을 최종적으로 확정지를 것"이라고 설명했다.

폐기물 예치금 650억 반환 논란

환경부가 지난해 "폐기물 예치금제"를 폐지하면서 그동안 가전업체들이 예치한 7백억원 가운데 6백50억원 가량을 돌려주지 않기로 해 논란이 되고 있다.

이에 따라 가전업체들은 환경부를 상대로 소송을 검토중이다.

최근 환경부와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 LG전자 등은 환경부가 올해부터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 도입과 함께 폐기물 예치금제를 없애면서 그동안 업체가 맡긴 예치금을 찾아갈 수 없도록 한 것은 위헌 소지가 있다고 강력 반발하고 있다.

폐기물 예치금제는 환경보호를 위해 재활용이 가능한 물품을 만드는 제조업체에 대해 일정 비용을 부담시킨 뒤 폐제품을 회수해서 재활용한 경우에 한해 돌려주는 제도다.

환경부, 환경학과 졸업생 대상 현장실습 실시

환경부는 지난 6월 9일 환경관련 학과 졸업생이나 졸업예정자를 대상으로 한 '환경산업현장 인턴쉽 시범사업'을 이달부터 4개월간 실시한다고 밝혔다.

16개 시·도별 지역환경기술개발센터가 주관하는 현장실습 프로그램은 센터별로 10명씩 모두 160여명이 참가할 수 있다.

환경부가 3억8천400만원을 지원하는 이번 사업은 환경오염 측정·분석, 환경기초시설 운영·관리 등 실습 위주로 이뤄지며 연수 참가자들에게는 월 60만원의 수당이 지급된다.

환경부 관계자는 "그동안 환경관련 학과의 낮은 취업률과 졸업생들의 실무능력 부족이 문제로 지적돼 왔다"며

“

환경부는 지난 6월 9일 환경관련 학과 졸업생이나 졸업예정자를 대상으로 한 '환경산업현장 인턴쉽 시범사업'을 이달부터 4개월간 실시한다고 밝혔다.

”

"이번 현장실습 프로그램이 취업으로 이어지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담수요금 수질차등지원제 내년 도입

원수 수질에 따라 요금의 일부를 지원 하는 "담수요금 수질차등 지원제"가 내년에 도입된다.

최근 한국수자원공사와 마산시에 따

르면 내년부터 낙동강 등 원수의 수질이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BOD)이 3ppm을 초과하는 경우 부과 용수요금의 10%를 지원하기로 했다.

이는 환경부 하천수질 기준으로 3급수 이상에 해당된다.

수자원공사는 연 부과 요금에 3ppm을 초과한 월수를 곱해 지원 금액을 산정하기로 했으며 이를 위해 환경부의 수질 측정 자료를 활용할 방침이다.

지원 대상은 낙동강을 비롯한 전 수계에 걸쳐 댐 원수를 공급받는 지방자치단체 등이다.

중소기업 환경문제 대응능력 취약

중소제조업체들이 환경문제를 심각한 경영과제로 받아들이고 있으나 여전히 이에 대해서는 소극적으로 대처해 대응능력은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6월 3일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가 중소기업체 530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중소제조업 환경애로 실태조사"에 따르면 환경관리 담당조직을 설치한 업체는 6.8%에 불과했고 35.1%는 담당자조차 없다고 응답했다.

그러나 여러가지 경영과제 중 환경문제가 차지하는 비중에 대해 79.6%가 "다른 경영과제와 동일하거나 그 이상"이라고 답변했다.

중소제조업체들은 가장 큰 부담이 되는 환경오염분야로 폐기물(30.4%)을 꼽았고 이어 수질(21.9%) 대기(18.1%) 소음·진동(12.3%) 등을 지적했다. 반면 부담분야가 없다고 응답한 업체

도 17.4%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현행 우리나라의 환경규제에 대해서는 “지키기 어려운 규정에 대한 보완 조치가 필요하다”고 응답한 업체가 37.5%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적정함(30.4%) 앞으로 더욱 강화해야 함(16.6%) 기업활동에 지장을 초래하므로 완화해야 함(15.5%) 등이 뒤를 이었다.

조사대상업체 중 15.3%는 환경 관련 법령위반으로 인한 처벌을 받은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위반분야로는 폐기물(34.6%) 및 대기(29.6%) 분야에 대한 응답이 높았다.

환경과 관련해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등 지도 점검기관의 방문을 받은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71.1%가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외에도 지구온난화의 원인이 되는 이산화탄소(CO) 등 온실가스를 규제하는 기후변화협약에 대해서는 57.3%의 업체가 “잘 모르는 편”이거나 “전혀 모름”이라고 응답해 중소기업에게 이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를 펼치고 지원 제도를 마련해야 할 것으로 분석됐다.

기업중앙회 관계자는 “환경관리 및 제도에 대한 실질적인 교육이 확대 실시돼야 하며 환경오염방지시설자금을 소기업자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절차의 간소화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폐기물 매립지 반입 수수료 '1일 정산제'로 변경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는 월별로 사후 정산하고 있는 폐기물 반입 수수료

를 이달부터 매일 정산하는 일일 정산제로 단계적으로 전환한다고 최근 밝혔다.

이에 따라 반입 업체들은 관리공사가 지정하는 은행 계좌에 매일 예상 반입료를 예치해야 하며, 관리공사는 다음날 반입 실적에 따른 요금을 인출하게 된다. 관리공사는 또 폐기물 반입업체의 예치금 부족에 따른 미납을 예방하기 위해 차량 1대당 200만원, 최고 2000만원까지의 보증금을 현금이나 보험증권으로 제출토록 했다.

“

국내 폐수종말처리장 10곳 중 1곳은 산업폐수를 제대로 처리하지 않은 채 하천에 그대로 방류하고 있으며 심지어 유입된 폐수보다 오염이 더 심해진 폐수를 방류하는 곳도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

폐수처리장 10곳 중 1곳 오염수 '칼칼'

국내 폐수종말처리장 10곳 중 1곳은 산업폐수를 제대로 처리하지 않은 채 하천에 그대로 방류하고 있으며 심지어 유입된 폐수보다 오염이 더 심해진 폐수를 방류하는 곳도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6월 8일 환경부에 따르면 전국의

120개 폐수종말처리장을 대상으로 14분기 점검을 실시한 결과, 11개 처리장의 방류수가 수질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번에 적발된 11곳의 처리장 가운데 경남 함안군 군북, 충남 서천군 장항, 예산군 주교, 논산시 가야곡, 경북 영주시 가흥 처리장 등 5곳은 작년도 1, 2차래적 적발된 시설로,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폐비닐 수거하면 보상금 드립니다

올해부터 농촌에서 발생하는 폐비닐을 수거하면 보상금이 지급된다.

한국자원재생공사 부산경남지사는 최근 “올해부터 폐비닐을 수거해 이장 등의 책임하에 공동 집하장까지 운반하면 kg당 20~100원의 보상금이 지급된다”며 “농촌환경도 지키고 보상금도 받을 수 있는 만큼 폐비닐 수거에 적극적인 동참을 바란다”고 밝혔다.

한국자원재생공사는 매년 전체 발생량의 60~70%가 나오는 6~8월만 되면 폐비닐 수거에 곤욕을 치러왔다.

사업장 생활폐기를 크게 감소

해마다 늘어나던 사업장생활폐기물이 전용봉투제 시행 이후 크게 줄어들면서 부산지역의 생활쓰레기 발생량이 획기적인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생곡매립장의 사용 시한이 계획보다 길어지는 등 쓰레기 처리와 관련된 예산 절감효과도 기대할 수 있게 됐다.

최근 부산시에 따르면 지난 4월부터 서구와 남구 수영구 해운대구 등 4개구의 326개 사업장 배출업소를 대상으로 전용봉투제를 시범실시한 결과 지난달 하루평균 쓰레기 발생량이 83.2t으로 지난해 5월 123.4t에 비해 32.6%나 감소했다.

특히 시범 실시 지역은 아직 단속을 실시하지 않아 전용봉투 사용률이 60%에 그치고 있는 것을 감안하면 놀랄만한 감소 추세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 아황산가스 규제 등 환경기준 상고 대립

대구시와 지역 섬유업체가 대기 환경기준의 강화를 놓고 대립하고 있다.

지난 5월 29일 대구시에 따르면 대구는 1999년 환경부로부터 부산 광양 김해 등과 함께 대기환경규제지역으로 지정돼 자체적인 '대기개선실천계획'을 마련해 시행토록 돼 있다.

이에 따라 대구시는 용역을 거쳐 대구시 대기환경기준에 관한 조례를 마련해 2006년부터 시행키로 하고 현재 제정을 추진 중이다.

이 조례 제정안은 2006년부터 질소산화물(NOx)의 경우 현행 3백50ppm에서 50ppm으로, 아황산가스는 현행 2백70ppm에서 80ppm으로 배출량을 각각 낮추도록 돼 있다.

또 먼지의 경우 배출기준이 현행 50ppm에서 40ppm으로 규제된다.

그러나 서구 비산동의 대구염색공단은 이 조례가 시행될 경우 공단내 1백여 업체에 증기와 전기를 공급하는 열

병합발전소의 가동 중단이 불가피하다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대구염색공단 관계자는 "86년 고체연료(석탄)를 사용하는 열병합발전소로 가동을 시작한 염색공단발전소의 경우 이 기준을 맞추려면 막대한 시설비 투자가 선행돼야 한다"며 "현재 지역 섬유업체의 현실을 감안하면 무리한 요구"라고 말했다.

공단 측은 "대구시가 너무 급격히 대기환경기준을 강화해 산업활동을 제약하고 있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

대구시와 지역 섬유업체가 대기 환경기준의 강화를 놓고 대립하고 있다.

지난 5월 29일 대구시에 따르면 대구는 1999년 환경부로부터 부산 광양 김해 등과 함께 대기환경규제지역으로 지정돼 자체적인 '대기개선실천계획'을 마련해 시행토록 돼 있다.

”

현재 염색공단 열병합발전소의 아황산가스 배출량은 2백ppm 정도다.

■ 소규모 축산농가 축분 공공시설서 처리

그 동안 소규모 개별 축산농가가 직접 부담해 왔던 축산분뇨 저장소 설치비용이 정부 지원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환경부는 최근 소규모 축산농가의 축분 저장소 설치 재원을 축산업 발전기

금이나 정부 예산으로 지원하는 문제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소규모 축산농가는 소 70두, 돼지 700두 가량을 사육하는 농가다.

이에 따라 1천216만두의 소·돼지를 키우는 28만 축산농가 중 소규모로 사육하는 26만8천 가구(476만5천두)의 부담이 다소 덜어질 것으로 보인다.

환경부는 이같은 내용의 축분 관리 종합대책"을 마련, 축분 수거 운반 퇴비 유통 정화 처리 등에 관한 분야별 역할을 농림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해 빠르면 내년부터 1, 2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에 들어갈 계획이다.

■ 산업단지 폐수시설 지원 국고 50%

경북도가 산업단지 내 폐수종말처리 시설 설치비의 50%를 국비로 지원키로 한 법규를 몰라 입주업체가 내지 않아도 되는 설치비 127억9천200만원을 부당하게 부담시킨 것으로 감사원 감사결과 드러났다.

감사원이 지난 5월 27일 한나라당 이해봉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환경부가 지난 2000년 산업단지 면적에 관계없이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비의 50%를 국고로 지원토록 '국고보조 신청지침'을 개정했으나 이를 알지 못한 경북도가 8개 산업단지를 조성하면서 폐수처리시설 설치비 255억8천500만원 전액을 사업시행자인 자산업(주) 등에 부담시켰다.

때문에 자산업(주) 등 사업시행자가 경주 석계 화산 건천2 냉천, 칠곡 왜관 2, 고령 성산, 김천 구성, 상주 청리 등 8

개 산업단지를 조성하면서 입주업체들에게 부담을 가중시켜온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측은 “경북도는 지방산업단지 개발 및 실시계획을 승인할 때 폐수종말처리시설은 국고보조금을 교부받아 사업을 시행토록 입주업체의 부담을 경감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2월 환경부는 폐수종말처리시설에 대해 전액 국고보조를 할 수 있도록 ‘산업단지 지원에 관한 운영지침’을 개정했다.

■ 골프장에서의 맹 고독성 농약 사용 금지

지난 6월 28일부터 골프장에서의 맹 고독성 농약 사용이 금지된다.

앞으로는 수목의 해충 전염병 등의 방제를 위하여 시장 군수가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외에는 골프장에서 파라치온 등 17종의 고독성 농약을 사용할 수 없게 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 환경기술 개발 4400억 투입

올해중 차세대 ‘6T중 하나인 환경기술(ET) 개발에 4400억원이 지원되고, 오는 7월까지 ‘Post 반도체 기술 개발 및 이공계 공직진출 확대를 위한 방안’이 마련된다.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이하 국과위)는 최근 청와대에서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제12차 회의를 열고 참여정부의 과

학기술기본계획과 ET개발 시행 등 6개 안건을 심의 의결했다.

국과위는 참여정부의 과학기술 기본 계획과 관련 전체 연구 비중에서 기초 연구 투자를 25% 수준으로 끌어올리고, 동북아 R&D허브 구축과 과학기술의 국제화를 위해 해외 우수연구기관을 국내에 유치하는 한편 해외의 현지 공동연구센터를 30곳으로 늘리기로 했다.

“

지난 6월 28일부터 골프장에서의 맹 고독성 농약 사용이 금지된다. 앞으로는 수목의 해충 전염병 등의 방제를 위하여 시장 군수가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외에는 골프장에서 파라치온 등 17종의 고독성 농약을 사용할 수 없게 된다.

”

■ 하수슬러지 처리시설에 성공불제 도입

환경부는 직매립 및 해양배출 금지 등으로 하수 슬러지(침전물)의 처리가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효율적 처리를 유도하기 위해 성공불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성공불제는 환경관련 업체가 자체 자금으로 환경시설을 설치하고 시범가동이 성공적이라고 판단될 경우 지방

자치단체가 국고지원금을 일괄 지급하는 제도.

환경부는 성공불제를 통해 슬러지를 다양하게 처리할 수 있는 신기술을 도입해 재작년 기준 7%에 불과한 슬러지의 재활용률을 2005년까지 23%로 끌어올릴 방침이라고 지난 5월 27일 밝혔다.

■ 유럽 환경규제 전자업계 비상... 2006년 폐기물처리法 시행

유럽 지역의 환경 규제에 대해 국내외 전자업계가 대응책 마련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지난 4월 29일 벨기에 브뤼셀 시내 유럽정보통신산업협회(EICTA) 회의실에서 한국과 유럽의 전자산업 관계자들이 모여 유럽연합(EU) 환경 관련 규제에 대한 대응책을 논의했다.

2006년 유럽 지역에서 시행 예정인 전자전기장비 폐기물처리(WEEE Waste of Electrical and Electronic Equipment) 법안이 시행되면 제조업체들은 폐가전제품에 대한 회수와 재활용을 책임져야 한다. 국내 업계에서 유럽에 수출하는 품목의 70% 이상이 여기에 해당된다.

EICTA 환경분과 위원장인 안-윌렘 사이그론드는 “네덜란드의 경우 제조, 수집, 운송업체, 재활용 등에 참여하는 기업들이 모여 네덜란드전자제품재활용연합(NVMP)을 구성하는 등 나름대로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일본 소니와 일렉트로룩스 등은 환경 규제에 공동 대응키로 한 것으로 알려

졌다.

LG전자 품질경영팀 최광림 부장(환경기술그룹장)은 “자국 내에 전자산업이 없는 국가의 경우는 제조업체에 모든 비용을 떠넘기는 방향으로 법제화가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면서 “법제화가 이뤄지기 전에 국내 기업들이 참여해 조금이라도 유리한 쪽으로 이끌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유럽 지역의 환경 규제에 따라 국내 전자 자동차 업계의 비용은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전자업계의 경우 WEEE 외에도 2006년 유해물질사용제한(RoHS) 규제가 시행될 경우 VCR 1개 품목을 기준에 맞춰 변경하는 데만 1조원가량의 추가 비용이 들 것으로 업계는 예상하고 있다.

자동차업계의 경우 올해 안에 시행 예정인 ‘자동차생산자 재활용책임 의무화(ELV End-of-Life Vehicle)’ 규제에 따라 대당 147 210달러의 추가비용 부담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분뇨정화 등 3곳 중 1개시설 ‘불량품 제조’ 적발

오수나 분뇨를 정화하는 시설을 제조하는 업체 3곳당 1곳이 불량품을 만들어내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정화시설은 대부분 매설용으로 불량품 사용시 오수나 분뇨가 제대로 정화되지 않고 하천으로 방류돼 수질 오염을 악화시키기 때문에 이에 대한

철저한 관리 감독 강화가 요구되고 있다.

환경부가 지난 3월부터 4월까지 두달간 전국의 오수 분뇨 등 관련영업장을 지도 단속한 결과 오수처리시설 등 제조업체와 설계 시공업 정화조 청소업 등 총 577개 중 25개 업체가 불법행위를 해오다 적발됐다고 지난 5월 25일 밝혔다.

특히 이 가운데 오수처리시설의 경우 전체 45개 업체 중 29%에 달하는 13



탈지면이나 주사기, 수술용 칼 등 감염성 폐기물이 엄격히 다뤄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처리업체 10곳 중 2곳에서는 허술하게 처리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곳이 ‘오수 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염성 폐기물 10곳 중 2곳 처리 허술

탈지면이나 주사기, 수술용 칼 등 감염성 폐기물이 엄격히 다뤄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처리업체 10곳 중 2곳에서는 허술하게 처리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환경부는 전국의 감염성 폐기물 처리업체 140곳을 지도·점검한 결과 23곳(17%)이 감염성 폐기물 처리 지침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최근 밝혔다.

특히 23개 처리업체 가운데 전북 전주 시 천보산업, 익산시의 대성산업 등 10개 업체는 수직·운반한 감염성 폐기물의 종류와 양을 폐기물 인계서에 다르게 기록하거나 작성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지도·점검 강화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단내 폐수처리장 가동률 59%

산업단지과 농공단지 등에 설치된 폐수종말 처리장이 필요 이상으로 대규모로 건설돼 예산이 불필요하게 낭비된 것으로 드러났다.

환경부는 전국 458개 공단에 설치된 120개 폐수종말처리시설의 운영실태를 점검한 결과, 평균 가동률이 59%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최근 밝혔다.

또 점검대상 처리장 가운데 절반이 유입되는 폐수가 예상 기준치를 밑도는 등 수요를 제대로 예측하지 못해 합리적인 운영방안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